

# 전남,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주력산업으로 육성

### 김영록 지사, 베스타스와 3000억 협약 이어 발전소 현장 찾아 간담회·관련 기업 순방...“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구축 순조”

유럽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에 이어 23일(현지시간) 해상풍력을 전남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했다. 김 지사는 해상 플랜트 관련 대표 기업,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을 찾은 데 이어 300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베스타스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등 유럽의 해상풍력 기술과 자본을 전남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 한 호텔에서 베스타스 CEO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베스타스 15MW 터빈공장이 폴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전남에 건립(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된다”며 “부품·연관기업 유치에 원활하게 이뤄져 전남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이어 “앞으로 북포산항은 베

스타스 터빈공장과 함께 동북해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이자 전진기지로 도약, 베스타스와 전남도가 세계로 더 넓게 비상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헨릭 앤더슨 CEO에게 한국 연관기업의 상생, 해상풍력 인재 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해 공감을 얻어냈다. 이에 헨릭 앤더슨 CEO는 “김 지사를 형제로 생각한다”며 “전남도가 해상풍력을 긴 안목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고 향후 국산화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22일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라머스 A/S, 북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북포산항 설립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A)을 체결한 김 지사는 이어 덴마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본사를 방문해 임원진과 해상풍력, HDVC(초고압직류송전), 에너지저장 등에 관해 논의했다. 덴마크 CIP는 지난

2022년 전남도와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남 최대 발전사업자로 3.9GW 해상풍력을 추진 중이다. SK E&S와의 합작사업을 통해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또 덴마크 코펜하겐 미들그루덴(Middlegrundten)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시찰하며 단지 운영 노하우, 인근 어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들었다. 코펜하겐 항구에서 배로 20분 정도 들어가야 할 수 있는 미들그루덴 해상풍력단지는 암초지역에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다. 정부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을 물고기들이 산란 장소로 이용하면서 조업량 감소 등 부작용이 없어 어민들의 항의나 반발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세계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의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의 산업 기반과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남 해안에 조성될 우리나라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느끼고 이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럽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왼쪽)가 23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Filino 호텔에서 열린 베스타스 CEO 조찬 간담회에서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베스타스 CEO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속도낸다

### 2033년까지 3조6431억원 투입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 6431억원을 들여 건축물 녹색설계, 친환경차 전환,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녹색 성장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인 2030년

40%보다 강화한 것으로, 탄소중립·녹색 성장에 대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확고히 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3조6431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기반·협력, 교육소통 11개 부문 1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물 부문(45%)의 제로에너지화를 목표로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등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송 부문에선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과 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버스전용차로 운영 강화, 자전거도로 정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19개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 부문은 지역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첨단산업과 첨단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알이(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광주기업탄소액션’ 자발적 감축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 이행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시민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주택임대차신고제 제도 1년 추가 연장

### 다음해 5월까지...임대차 계약때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제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제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제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

해 노력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제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고, 임대차 신고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잦은 거래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특성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송희중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제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수수료가 없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해야”

### 보상 기준 피해를 완화·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건의

전남도가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를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에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

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를 10%를 초과해 재이양(재지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태풍, 호우 등은 기상특보와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나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 및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조량 감소에 따른 시설작물 피해가 14년 만에 재대로 인정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약 25% 이상 감소해 멜론,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대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임업·산림 직접직불금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전남도, 9월 지급 대상자 확정

“4월 30일 마감합니다.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을 홍보하고 나섰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

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한 뒤 9월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말 지급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임업인 4007명에게 임업직불금 86억원을 지급했다.

/김지서 기자 dok2000@kwangju.co.kr

## 문화예술이 숨쉬는 곳, 목포·신안으로 초대합니다.



동물과 어류 13000여종의 남농로에 위치한 “목포 자연사 박물관”



신안 자은도에 조개박물관, 수석미술관, 자생식물연구센터 등의 “1004 뮤지엄 파크”

- 목포시청 직원 일동
- 신안군청 직원 일동
- 목포시의원 일동
- 신안군의원 일동
- 목포상공회의소

- 농협중앙회목포신안및관내농협 직원 일동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 신안군산림조합 직원 일동
- 목포농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 목포시농협동조합 직원 일동
- 씨월드고속해리주식회사 직원 일동
-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직원 일동
- 한국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 직원 일동
- (유)서남환경 직원 일동

- (유)중앙환경 직원 일동
- 목포시의료원 직원 일동
- 목포한국병원 직원 일동
- 목포중앙병원 직원 일동
- 목포기독병원 직원 일동